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신향락



이탈리아에선 파피아에 의한 테러나 대형 공직비리가 터졌을 때 시민들이 나서 '하얀 손' 캠페인을 벌인다. 하얀 손이란 부패한 '검은 손'의 반대되는 의미다. 이탈리아 부정·부패의 중심에 있던 베를루스쿠니 전 총리가 재임 당시 '뭇뚱 짓'을 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한 것도 '하얀 손' 시위였다.

인접 국가 그리스도 '얇은 꼴'이다. 식당 허가를 내려면 공무원에게 최소 1만 유로(약 1620만 원) 이상의 뇌물을 건네야 한다. 몸이 아파 공공의료기관에 갈 때도 별도의 돈 봉투를 의사에게 찔러 줘야 한다. 로마제국의 상징인 이탈리아와 근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그리스가 국가 부도 위기를 맞고 있는 것도 관료주의와 부패가 낳은 악순환의 결과다.

연이은 강운태 시장 사과

지금 광주시가 총인처리시설 입찰 비리와 관련, 심각한 내상(內傷)을 앓고 있다. 시민들의 불신에 따른 외상(外傷) 또한 그에 못지 않다. 강운태 시장은 "적지 않은 공직자들이 연루된 데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연이어 고개를 숙였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지난 6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그 규모와 수반에서 상상을 초월한다. 고위 공무원과 대학교수, 업체 관계자, 정당인 등 사법처리된 인사만 31명에 이른다. 비리 관련 단일사건으로는 광주지검 개청 이래 최대 규모다. 공무원과 교수 등 13명은 업체 관계자

광주시 '하얀 손' 캠페인 아는가

15명으로부터 기본설계 평가를 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에 달하는 현찰을 받아 챙겼다고 한다. 일부는 해외여행과 골프 접대와 거액의 상품권도 마다하지 않았다.

총인사실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자 총체적 '비리 북마전'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가 발주한 이 시설은 공사비가 982억 원에 이르는 초대형 공사로, 지난해 4월 대립산업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지뢰' 폭발은 시간의 문제였다.

관련자만 수십 명에 이른데다 전방위 로비로 인해 공개된 비밀처럼 소문이 확산됐으며,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됐던 녹취

록이 공개된 게 이를 싸잡아 말해 준다. 녹취록에는 지난해 5월 중순 광주 시내 모식당에서 공무원과 대립산업 관계자가 사전 담합 및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내용과 심사위원 이름까지 등장한다. 관련자 모두 '교도소 담장 위'에 뛰어든 불나방이나 다름 바 없다.

입찰 비리는 심각한 형세 낭비를 부른다. 총인사실 입찰에 참여한 대립, 현대, 금호, 코오롱 등 4개 업체는 사전 담합을 통해 공사 예정가의 94%까지 가격을 낮췄다. 94%는 상한선으로 공사비를 최대한 빼먹자는 것이다. 턴키(설계·시공 일괄 발주) 입찰 방식의 맹점 탓이다.

다수가 참여하는 일반 경쟁입찰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담합이 불가능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 만큼 공사비는 낮아지고, 형세도 절약되는 셈이다.

조직적 비리는 심사위원 선정과 운용의 구조적 모순에도 있다. 심사위원은 대부분 전문성을 요하는 대학 교수들이 위촉되지만 그들은 언제든 로비 대상이다. 그들이 검은 손의 유혹에 빠뜨리는 건 무엇보다 '솔솔한 재미'에 있다. 업자들이 골프도 모시고, 간혹 투독한 봉투도 찔러주다 보니 헛된 공명심에 사로잡히고 '간'도 커지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이런 심리를 이용해 적절히

관리하기도 한다. 그들이 거슬러거나 '악수'를 피하면 1~2년의 위촉기간이 다할 무렵, 공무원들의 무기인 해촉을 통보하면 그만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총인사실 사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구조적 병폐를 방치한 데 있다. 광주시는 공직비리가 터질 때마다 '청렴'을 강조하며 대책을 내놓았지만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었다. 강운태 시장의 취임 일성도 청렴이 아니었던가.

말만 앞세운 '청렴'과 대책

박광태 전 광주시장 재임 시 광주시가 무려 26억 원에 달하는 백화점 상품권을 업무추진비 카드로 구입했다는 것도 충격적이다. 역수로 보아 상품권을 현금화했다는 얘기인데, 비자금이란 독적이든 명백한 범죄행위다. 정확한 규모와 사용처 등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다.

보름 전 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한 입찰 비리와 관련,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교수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면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연구실 밖에서는 절대 안 만난다. 둘째, 작은 회사 기념품 말고는 안 받는다." 한 번의 식사 자리가 '악마의 덫'이 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공직자라면 새겨야 할 보와 같은 귀감이다.

그럼에도 공직자가 도덕성을 상실하고 대책이 사후약방문이라면 하얀 손 시위 외엔 달리 도리가 없다. 시민들이 모두 나서 하얀 장갑을 끼고 말다.

(이사·논설주간) hshin@kwangju.co.kr

시설

광주시 의문의 상품권 26억 내역 밝혀야

지금 광주시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총인처리시설 입찰 비리와 관련, 다수의 고위 공무원이 사법처리된데다 박광태 전 시장 재임 시 업무추진비 카드로 광주의 한 백화점에서만 무려 26억 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갖가지 의혹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광주 현대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송원 측이 지난 2011년 4월 강운태 광주시장과 담당 공무원 등 3명을 상대로 상품권 판매대금 5억82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밝혀졌다.

이 백화점은 소장에서 "2004년 당시 광주시 비서실에 근무하던 공무원 이모 씨의 형이 법인카드 5~10매를 가져와 매달 500만~1000만 원 어치의 10만 원 짜리 상품권을 구입했으며, 이후 2010년 초까지 모두 26억 원 상당을 가져갔다"고 적시했다.

백화점 측은 또 "거래가 잦고 규모가 커지면서 이씨의 형에게도 외상으로 상

품권을 내주기 시작했으며, 외상거래가 2010년 초에는 수억 원에 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광주시 관계자는 "상품권 구입비 26억 원 가운데 21억 원에 대한 구입과 사용 내역은 이미 법원에 제출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건 분명 의혹이 있다는 얘기다.

이후 송원은 불신을 키우고 조장할 뿐이다. 업무 추진에 사용해야 할 카드로 수십억 원의 상품권을 구입했다는 게 시민들로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각에선 상품권을 현금화해 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소문도 나온다. 시장의 최측근인 비서실 공무원이 직접 관여했다는 게 미뤄 짐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먼저 상품권 구입과 사용 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총인사실 비리사건에서 보여준 우를 또다시 범해선 안 된다. 시민들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다.

국비 지원 끊긴 광주과학관 국립 맞나

지난해 10월 개관 예정이던 국립 광주과학관이 공사마저 중단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와 광주시가 과학관 운영비 분담비율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 하면서 정부가 건설비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광주과학관은 국비 등 총 848억 원의 교육진흥비로 조성되는 국책사업으로, 첨단 과학단지 내 9만8248㎡의 부지에 건립 중이다. 하지만 현재 골조공사가 마무리되는 등 전체 공정을 82%에 이른 상황에서 97억 원의 건설비 지원이 끊겨 공사가 중단됐다.

정부는 연 운영비 90억 원 중 자체 수입 7억 원을 제외한 83억 원에 대해 국가 60%, 광주시 40%의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광주시는 국가사업인 만큼 전액 국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갈등은 지난 2008년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비롯됐다. 광주시와 관계부처는 건설비의 경우 총 공사비의 70%는 중앙정부가, 30%는 지자체가 부담

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운영비 분담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때문에 그동안 운영비 분담을 놓고 협의를 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운영비 분담의 1차적인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고 본다. 과학관이 국립인 만큼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지향으로 보완한 광주과학관 운영비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광주시에 "국립과학관은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과학관 육성법' 제3조 규정을 제대로 연관하지 않고 협의의 체결한 우를 범했다. 엄연히 국가가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추후 협의'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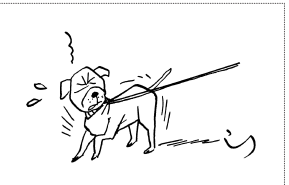
과학관의 지방 분산은 과학기술의 저변 확대라는 측면이 크다. 정부는 이제라도 운영비를 전액 지원해 본래 취지를 살리기 바란다. 광주시 역시 향후 업무 연전에 만전을 기해 또다른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불교에서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여섯 가지 세상에 번갈아 태어나고 죽어가는 육도윤회(六道輪廻)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천상도, 수라도, 인간도, 축생도, 아귀도, 지옥도 그 것인데 특히 축생도와 아귀도, 지옥도는 인간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신세이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에쿠스 트렁크에 매달려가다 숨

진 애완견' 이야기는 '인간에게 좌지우지 되는' 축생의 운명을 숨김없이 보여준다. 전쟁에서조차 죽어 가는 적에게 필요 이상의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탄두가 인체 내에서 통개지지 않는 '풀 메탈 재킷(Full Metal Jacket)' 총탄

풀 메탈 재킷



을 사용하도록 해이(이 육전조약(Hague Regulation land warfare)까지 체결한 인간이지만, 또 다른 세상의 소속원인 축생의 고통에는 놀랄만큼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다. 지구라는 행성은 인간에게만 천국이지만, 다른 모든 생명에게는 지옥이라는 생각이 든다. /홍정기 정치부 차장 redplane@kwangju.co.kr

은펜칼럼



서미정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에 피어나는 새싹과 같이 장애인도 재할의지를 다지라는 의미로 국가가 제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며칠 전 지났다.

이날은 국민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관심을 더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정하였다. 이날 광주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졌다.

필자는 장애인의 날을 지정하여 이날만 특별하게 장애인을 위해 한끼 점心和 기념품을 나눠주는 것으로 할 일 다하고 관심 가졌다고 생각해는 형식적 행사에 매우 불만이며, 이런 장애인의 날 자체를 거

장애인이 꿈꾸는 희망세상 '배리어 프리' (barrier free)

부한다. 올해도 꽃피는 희망의 봄은 다시 우리 곁으로 찾아 왔지만 우리 사회 장애인의 삶(장애인 교육권, 노동권, 이동권, 문화권 등)은 여전히 힘이 들어 차갑고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고 있다. 장애 당사자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다.

최근 필자는 뇌병변 여성장애인이 회원이 구직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상담을 통해 전해들으면서 그동안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여러 가지 필요한 자격증을 열심히 취득하고 몇 군데 사업장에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면접에서 거절당하는 현실을 들었다.

어느날 어투, 약간 흔들리는 걸음걸이를 본 사업주는 몇 마디 묻지 않고 당황해 하며 어렵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또한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 활동가는 친구와 외식을 하기 위해 무자정 식당을 갔다가 식당입구에서부터 높은 계단의 장벽에 부딪히고 장애인화장실 미설치 등으로 곤욕을 치르는 경험을 하고선 이젠 미리 갈 장소들 사전점검을 꼭 하고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의 여가문화생활 활동 중에서도 영화관람을 하는 시각장애인이 대사가 들리진 않거나 시각적으로 세부적인 묘사를 알기 힘들고, 청각장애가 있으면 시각적으로 세부적인 묘사는 알 수 있지만 대사가 들리지 않아 제대로 영화를 보기에 힘든 부분이 많다. 이렇듯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동등하지 않은 차별적인 현실에 사회적 구조를 바꾸어내고자 투쟁하는 현상이 있어 필자도 함께했다.

4월 20일 11시, 이날 광주시교육청 앞에서는 장애인 교육권 투쟁을 위한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회원들 70여 명이 "차별에 저항하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의 날로 기자회견을 마련하였다.

장애인교육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몇 가지 요구안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1. 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한 특수교육교

원의 법적 정원 확보 2. 장애학생을 위한 시교육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제시 3. 장애성인의 교육권보장 4. 장애학생의 인권문제 해소를 위해 가칭 '장애학생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장애인도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고 평등하게 교육받으며 살 권리에 대해 중증장애인이 당사자발언과 장애자녀의 교육에 대해 국가적 책무임을 교육청관계자들을 향해 목소리 높여 외치는 부모님의 발언을 마치고 시교육청에서 시청까지의 거리행진으로 이어졌다.

차별이란 이름으로 배제 받고 살고 있는 다양한 장애인의 권리확보와 평등한 삶을 위한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다.

1년 365일 매일 일상의 광동함으로, 일상의 자유로움으로 장애인이 살기좋은 사회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고흥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세상에서 진정한 우리 이웃으로 공존하면서 상생의 길을 가는 희망의 그날이 올 때까지... (사)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 회장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수질오염 총량제가 지역개발 발목을 잡는다?



최형욱

기존의 배출농도 위주 규제방식에서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자가 농도를 희석하여 배출하면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전체 총량은 줄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제1단계 평가결과에 따르면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시행지역인 영산강·금강·낙동강 수계(水系)에서 배출된 수질오염물질 총량이 1일 평균 21만3322kg으로, 오염물질 배출허용량인 28만3970kg을 크게 밑돌았다고 한다. 특히, 영산강 수계의 경우에는 주요지점의 수질이 86%나 개선되었다.

실제 지난 2002년 대비 2010년 오염물질(BOD5) 발생량은 11% 증가한데 반해, 동기간 대비 실제 배출량은 35%나 감소했다. 지자체는 부분별한 난개발 지양, 녹지조성 면적 증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확대,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의 자발적 노력을 해 왔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이 일단 성공적이라고 평가 할만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질오염 총량관리는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이다. 정부는 좁은 국토면적과 높은 인구밀도 때문에 전국에 걸쳐 유사한 기준에 의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수질개선보다는 개발사업에 치중해 수질오염물질 총량 저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유역 관리 강화를 통한 하천 수질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는 더욱 강화해야 하고 성공적 정착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가장 필요한 것은 피드백이다. 제1단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미흡했던 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정책적, 기술적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2단계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특성화를 시켜 해당 유역의 특성, 수질환경기준 초과율, 수질오염원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수계별 관리대상물질을 달리하여야 한다.

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의 변동성 및 하천환경변화와 연계하여 목표 수질을

재설정하며 수질오염원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체계성이 필요하다. 최적관리(BMPs : Best Management Practices), 저영향개발(LID : Low Impact Development) 등을 감안하여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고, 부하지속곡선(LDC : Load Duration Curve)을 이용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좁은 국토면적과 높은 개발용구가 상충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입지규제가 아닌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의 시행은 개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수질개선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 이해관계자 모두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의 취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겠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로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培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지 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